

외지업체에 일감 뺏겨 지역 건설사는 줄도산

도내 업체 공사비율 30% 못넘어... 70% 넘게 외지업체가 수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참여 20곳 중 토종기업 5곳뿐
철새업체 전입 방지 위한 건의서 전달 등 제도적 장치 요구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김모(56·춘천)씨는 지난달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확정되면서 올림픽 관련 각종 공사들이 쏟아져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형공사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철새업체에 밀리며 지난 5년간 제대로 된 공사 한 건 수주하지 못했다. 김씨는 “외지업체들이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항도업체의 몫을 빼앗고 있다”면서 “철새업체 난립으로 지역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철새업체에 일감을 뺏겨 설 자리를 잃고 있

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액은 2013년 8조520억원, 2014년 8조8,740억원, 2015년 9조6,790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와 부대사업이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의 공사비율은 30%조차 넘지 못했다. 70% 이상은 외지업체가 수주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업체의 공사수주 비율은 28.2%, 금액으로는 2조7,300억원에 그쳤다. 도내 업체 비율은 2010년 35.4%에서 지난해 28.2%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 전

기공사 8건에는 대표사와 공동구성원으로 총 20개 업체가 참여했었다. 이 중 도내 토종기업은 전체의 4분의 1인 5개 업체에 불과했다. 전체 공사액(932억4,344만원) 기준으로는 16.9%인 157억3,293만원만 수주했다.

이처럼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외지·철새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 제한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앞으로 외지·철새업체 전입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꾸준히 건의서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도내 경제와 건설업을 지탱하는 지역 업체들이 배제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건전한 건설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처들이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道 3년 연속 국비 6조 확보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첫 400조
목표액 6조49억 초과 유력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 시대를 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분야 예산은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당초 내년도 국비 목표였던 6조49억원 초과 확보가 유력해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정부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

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발맞춰 공사가 진행 중인 12개 경기장 및 철도·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2,3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모든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동서고속철도 66억·문화올림픽 291억' 반영

도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

도가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데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SOC 확충이 큰 인자 역할을 했다.

도는 "자체 파악한 결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도 관련 예산이 목표였던 6조49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내 SOC 예산은 1조7,58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목표 1조5,052억원보다 1,79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철도예산은 1조2,018억원이다. 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66억원이 반영됐다. 여주-원주 철도는 22억원, 원주-강릉 3,040억원, 포항-삼척 5,069억원, 원주-제천 2,575억원, 경원선 복원 846억원, 기존선의 고속화 예산으로 400억원이 담겼다.

고속도로 예산은 3,255억원을 확보했다.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 1,650억원을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 1,517억원, 올림피지원 IC개량 88억원 등이다.

SOC감축기조에도 목표 상회 평창올림픽 예산 견인차 역할

양양오색케이블카 반영 안돼 향후 국회 심의서 추가 결실

국도는 7개 노선에 2,302억원 국지도는 3개 노선에 276억원을 각각 정부안에 담았다.

문화올림픽 예산은 올해 70억원에서 291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당초 300억원을 목표로 했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적인 문화축제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 'G-365일'을 맞아 붐업(Boom Up)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 공연물을 제작해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11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또 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IoT) 시현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현안 예산으로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마무리 공사비 110억

원,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광길 공사비 28억원 등이 반영됐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750억원에서 150억원 늘어난 900억원이 담겼다. 원주 보훈요양원 20억4,000만원,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14억4,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45억원이 포함됐다.

반면 양양 오색케이블카와 올림픽정원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현·홍현표기자

■2017년 주요 SOC정부예산단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예산 정부(안) |
|---------------|----------------|
| 합계 | 17,518 |
| 철도 | 12,018 |
| - 춘천-속초 | 66 |
| - 여주-원주 | 22 |
| - 원주-강릉 | 3,040 |
| - 포항-삼척 | 5,069 |
| - 원주-제천 | 2,575 |
| - 기존선고속화 | 400 |
| - 경원선복원 | 846 |
| - 소계 | 3,255 |
| - 동서고속도로 | 1,650 |
| - 올림피지원(IC개량) | 88 |
| - 영동고속도로안전개선 | 1,517 |
| - 동해고속도로 | - |
| - 제2영동고속도로 | - |
| 국도 | 2,302 |
| - 7개 노선 | 2,302 |
| 국지도 | 276 |
| - 3개 노선 | 276 |

※국도 유지보수비 제외

도내 16개 노선 '4차 국도·국지도 사업' 포함

국비지원 받아 시설 개량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16~2020년) 사업에 도내 16개 노선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19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도의 경우 원주 신림~관부 구간과 철원 오지~동송 구간 등 2개 노선의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이번 4차 계획에 포함됐다. 홍천서석우회도로, 정선~북면, 정선3교, 안흥~방림, 지촌~사내, 양구~원통, 연곡~현북, 철원 서면~포천이동, 춘천~화천1,2 등 9개 구간은 시설개량 사업에 담겼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주 포진~문막, 도계~영월, 원주 지정~흥업, 동막~개야, 미로~하장 등 5개 구간이 시설개량 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

을 받는 사업 대상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새누리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은 "지역에 꼭 필요한 도내 국도·국지도 사업이 4차 계획에 다수 포함된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

널미재터널 숙원 풀었다

【홍천】홍천지역의 숙원인 널미재터널 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널미재터널은 서면 동막리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포함된 구간은 서면 동막~개야 구간이다.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폭우우전을 하던 이곳에 터널이 뚫리면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과 유치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홍천군 서석면 국도 56호선에 위치한 우회 2차로 개량공사

홍천 동막리~경기 위곡리 국도부 5개년 계획에 포함 황 의원·노 군수 "접근성 개선 관광산업 재도약 기대"

1.5km 구간도 반영됐다.

■널미재터널 개요=국지도 86호선에 위치한 널미재터널은 해발 627.2m의 장락산을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터널 구간 2.5km, 493억원이 반영됐다. 군은 여기에 도로 확·포장 구간 2.15km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56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 감소=장락산을 넘어가는 구간은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동절기 안

전사고가 속출했다. 이 구간에 2014년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3년과 2012년에는 각각 12건이 발생했다. 하루 교통량은 4,072대이나 상단수 운전자가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수업이 관계부처 방문=널미재터널은 당초 국토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약으로 내세운 황영철 국회의원과 노승락 군수가 관계부처를 수업이 방문, 강력히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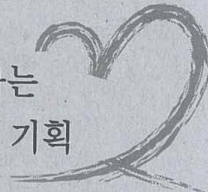
지난해 4월 당시 유일희현 경 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계획 반영을 요청, 이번이 포함되게 됐다.

■관광산업 재도약 기대=널미재터널은 수도권에서 대안거리 노선인데다 홍천강수변도로 및 팔봉산 유원지의 끝바탕 연결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황 의원은 노 군수는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산업 재도약이 기대된다"며 "조기 완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ang2276@

알립니다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6 강원사랑 3대 기획**



개회식 : 9월 8일 (목) 오후 5시 정선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재향도민과 출향도민의 어울림 한마당인 '2016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가 9월 8~9일 이틀간 정선군 하이원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강원사랑 3대 기획은 강원 현안의 대안을 모색하는 '강원현안포럼', '함평나비축제'를 성공시켰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강원발전 특강'과 만찬간담회, 정정 강원인의 대자연 품에서 고향 사랑의지를 다지는 '제13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2016 강원현안포럼
▶일시 : 9월 8일 (목) 오후 3시
▶장소 : 하이원호텔 컨벤션홀 2층 펠름

2 강원발전 특강 & 만찬간담회
▶일시 : 9월 8일 (목) 오후 5시
▶장소 :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특강 :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블루오션 전략과 창조경영'



이석형 회장

3 제13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
▶일시 : 9월 9일 (금) 오전 6시30분
▶장소 : 정선군 하이원CC

- 주최 :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민회중앙회
- 후원 : 강원랜드,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국회의원협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선군
- 행사문의 : 강원도민일보 전라기획부 (033-260-9310~1)

2020년까지 국·지방도 16개 신설

국토부 5개년 계획 고시
춘천~화천 1,2구간 등
연차별 신규 설계 추진

도내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개 노선이 오는 2020년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따르면 도내 16개 국도 및 국지도 노선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16개 사업 중 국도 신설 및 확장은 △신림~관부 4차로 확포장(국도 5호선 13.2km, 사업비 864억원) △오지~동송 4차로 확포장(국도 87호선 3.0km, 248억원) 등이다.

또 국도 시설개량 사업에 △서석우회 2차로(국도 56호선 1.5km, 61억원) △정선-북면 2차로(국도 42호선 3.7km, 495억원) △춘천-화천 1,2구간 2+1차로(국도 5호선 19.4km, 3703억원) △정선 3교 2차로(국도 42호선 0.8km, 287억원) △안흥~방림 2차로(국도 42호선 24.5km, 2199억원) △지촌-사내 2차로(국도 56호선 1.2km, 308억원) △양구-원통 2차로(국도 31

호선 12.0km, 713억원) △연곡-현북 2차로(국도 59호선 14.2km, 2337억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2차로(국도 47호선 5.7km, 322억원)가 반영됐다.

국가지원지방도에서는 시설개량 사업에 △원주 포진-문막 2차로(국지도 49호선 2.7km, 159억원) △도계-영월 2차로(국지도 88호선 7.7km, 1228억원) △원주

지정-홍업 2차로(국지도 88호선 11.6km, 676억원) △동막-개야 넘미저터널(국지도 86호선 2.5km, 493억원) △미로-하장 2차로(국지도 28호선 14.4km, 870억원)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신규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진민수



도의회 올림픽 시설 점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30일 알펜시아 스키점프장과 개 폐회식장 공사현장을 찾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 속도낸다

**내년도 예산 66억 반영
도, 2년째 국비 6조대**

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66억원이 반영,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강원도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6조 49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

출기로 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주요SOC사업 예산으로 총 1조 7581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SOC 관련 예산으로 1조 6052억원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1799억원이 증액됐다. 철도 예산은 목표보다 15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최근 사업이 확정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66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당초 내년 사업비로 5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16억원이 늘어났다. △원주-강릉 철도는 목표보다 715억원이 증액된 3040억원 △포항-삼척철도는 5069억원 △원주~제천 철도는 2575억원 △경원선복원 사업은 846억원이 배정됐다. 고속도로 예산은 올해 제2영동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크게 줄었다. △동서고속도로 1650억원 △올림픽지원IC 개량사업 88억원 △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사업 1517억원이 배정됐다. 국도 7개 노선과 국지도 3개 노선에 각각 2303억원과 276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인 동계올림픽 관련 경기장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2282억원, 문화올림픽 290억원, 평창급수체계구축사업 54억원, 올림픽특구 2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동해항 3단계사업과 속초항 국제터미널사업에 900억원과 190억원이 수립됐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개최지 자체 문화올림픽사업 △올

림픽 개최지 화장실 개선사업 △연안침식방재센터 건립 등의 현안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 7000억원으로 전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억원) 늘어났다

▶관련기사 5면 남궁창성 백오인

홍천 숙원 '널미재터널' 건설

국토부 국지도 계획 반영

동막~개야 2.5km 구간

'마의 구간' 오명 탈피

홍천지역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널미재터널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포함돼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천군(군수 노승락)과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국지도 86호선 서면동막~개야 구간이 국토부 국지도 5개년 계획 중 시설개량 사업에 포함됐다

고 30일 밝혔다.국지도 동막~개야구간 사업은 널미재터널을 포함해 2.5km 구간으로, 4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국지도 86호선에 위치한 널미재는 장락산(627.2m)을 지나는 도로로, 굴곡진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마의구간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도로는 하루 40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면서 지난 2012~2013년 24건, 지난해 9건의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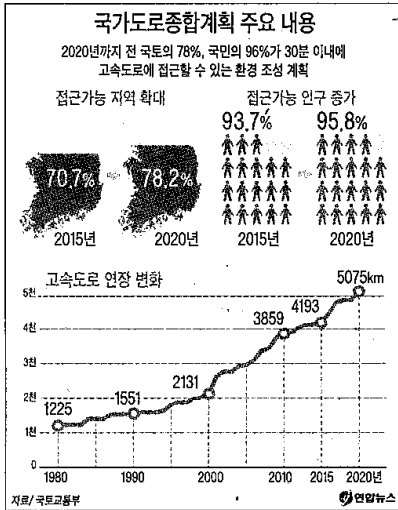
노승락 군수와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널미재터널 공사 요구와 관련,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그동안 수차례 정부를 방문, 널미재

터널공사를 건의했다.

널미재 터널이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는 수도권에서 대명비발디파크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인근에 홍천강 수변도로와 팔봉산 유원지가 위치해 있다. 노승락 군수는 "널미재터널이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홍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황영철 의원과 적극 공조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고속도로, 2020년까지 5075km로 확장



간선도로 건설·관리 37兆 등 72兆 투자
국민 96%, 30분내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

정부와 민간이 2020년까지 총 72조원을 투자해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도로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193km인 고속도로 총 연장을 2020년까지 5075km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완공하거나 착공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를 복합 개발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총 투자액은 약 72조원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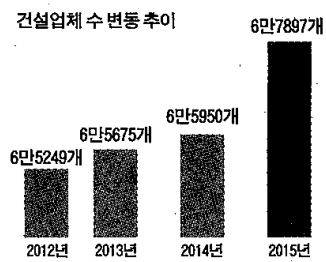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한 고속도로를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벌인다.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 주민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꾸준히 확충한다.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차원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의 교량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 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유소, 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종합계획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신재생 에너지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유지관리 자동화 △슬림화·개발화 △사고 없는 도로 △유리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 김태형기자 kth@

지난해 건설 '업체수·기성액·계약액' 증가폭 확대

실적 보유 기준 6만7897개
건설공사액, 해외 줄었지만
국내는 전년보다 9.3% 늘어



지난해 건설업체 수와 건설공사액(기성액), 건설계약액의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체 수는 6만7897개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건설업체 수는 지난 2012년 6만5249개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만5675개, 2014년 6만5950개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에는 건설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업체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4145개로 전년(2만3643개) 대비 2.1%,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만3752개로 전년(4만2307개)보다 3.4% 늘어났다.

건설공사액과 건설계약액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264조8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10년 214조53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공사액은 2011년 224조2290억원, 2012년 232조5030억원, 2013년 242조2750억원, 2014년 249조110억원으로 5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해외 건설공사액이 51조1000억원으로 전년(53조5370억원) 대비 4.6% 줄었지만 국내 건설공사액이 213조7350억원으로 전년(195조4730억원)보다 9.3% 늘어나

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건설계약액의 경우 지난해 265조34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 늘어났다. 국내 건설계약이 236조9150억원으로 전년(185조4770억원)보다 27.7% 증가한 반면 해외 건설계약액은 28조4300억원으로 전년(46조540억원) 대비 38.3% 급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 지역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건설공사액과 건설계약액이 증가하면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400兆 수퍼예산 시대... 더 쪼그라든 'SOC'

정부, 2017 예산안 확정

전체 예산 3.7% 확대 편성 불구
SOC 21.8兆로 9년만에 최저
노후 인프라 개선 골든타임 놓쳐
안전 위협... 경제성장 발목 우려

사상 처음으로 정부 지출 예산안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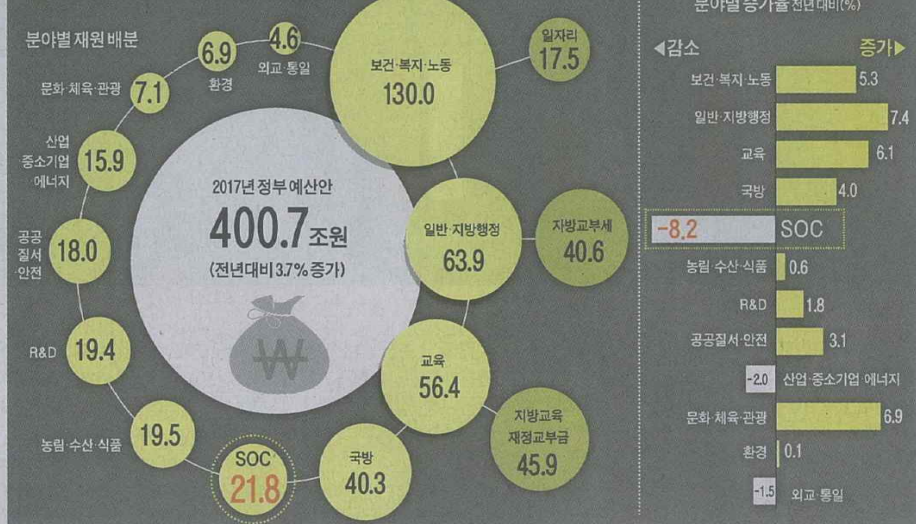
내년 지출 예산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2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19조6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 관련기사 23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에 최우선순위를 뒀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SOC 21조8000억(올해 대비 8.2% 감소) △공공질서 안전 18조3111억(3.1% 증)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조9000억(-2.0%) △보건·복지·노동 13조5000억(5.3%) △연구개발(R&D) 19조4000억(1.8%) △환경 6조9000억

2017년 정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단위:조원)



원(0.1%)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원(6.9%) 등이다.

올해에 이어 SOC 예산이 감소폭을 키운 반면 일반·지방행정, 문화·체육·관광,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 SOC 예산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해 경기 회복을 위해 24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 SOC 예산은 올해 4.4% 감소하고서 내년에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정부는 SOC 예산을 2017년 21조8000억원, 2018년 20조3000억원, 2019년 19조3000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연평균 6.0%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SOC 예산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 안전 위협, 사회적 비용 낭비로 직결된다. 실제 SOC 예산이 늘어난 작년에는 스웨덴 경영대학원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5위로 전년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는 29위로 4단계나 낮췄고 내년에는 순위가 추

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SOC 예산 감액으로 인해 노후 인프라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후 인프라의 사고 위험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투입은 불가피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연구실장은 "성장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SOC 투자를 줄이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SOC 투자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하! 그렇구나

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이 선급금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OO건설은 1995년 10월경 발주자인 △△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OO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OO건설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연대보증을 했다. OO건설은 각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교부했다. 그 후 OO건설이 부도가 나 발주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계약은 해지됐다. OO건설이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발주자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해 원고는 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OO건설의 도급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보증인이 됐다.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채무자인 OO건설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까지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쟁점
정부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돼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

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방이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OO건설과 발주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의 보증책임을 범위는 OO건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된다. 그 밖에 OO건설의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0.08. 선고 99다20773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선급금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사연대보증인은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선급금과 같은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가계약법 등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현재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자로서는 과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사시행 외에 선급금과 같은 금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